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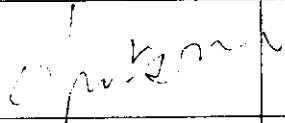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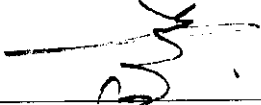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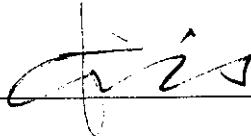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劉永和	劉永和	
김영섭		
이정일	이정일	
김병룡	김병룡	
양순경		
강봉우		
권건중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426
------	------

발의연월일 : 2010. 4. 12.

발 의 자 : 유영화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공동도급·하도급등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 공사의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과 지역업체 공동도급·하도급 비율 극대화를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 공사에 대한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규정(안 제4조의2)
-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공정거래 정착(안 제4조의3)
-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권장(안 제4조의4)
-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안 제4조의5)

3. 개 정 안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입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를 “매년말 점검하여 이를 제천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5(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할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 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4조의3(하도급의 적정성 심사)</u>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신 설)	<u>제4조의4(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u>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u>제4조의5(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u>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p> <p>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p> <p>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생략)</p>	<p>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 ----- -----</p> <p>1.- 2.(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타법개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20, 2008.12.31>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2008. 3.21, 일부개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1호, 2010.2.16, 일부개정]**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6.30]